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새 내각, 재정건전성 강화 및 탈디플레이션 경제정책 기조

- 새로 출범한 간 나오토 내각은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간접세를 인상하는 한편,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하토야마 전 내각은 보조금을 통한 국민가계 지원에 집중한 성장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민간소비 활성화를 유도했으나,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등 재정건정성 악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.
 -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간 나오토 내각은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인상 조치로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, 내수경기 및 기업활동 진작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특히,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당분간 재정완화책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간 나오토 내각과 유동성 확대로 물가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일본은행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.
 -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안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 최근 남유럽발 금융 불안으로 인한 엔화강세가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음.
 -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간 나오토 총리는 재무상 시절부터 현재의 재정완화책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, 일본은행은 유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지금이 금융완화책을 수정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디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함.
 -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엔화약세론자인 간 나오토 총리가 수출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의 금융완화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 마련 및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일본은행과의 관계 정립이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(일본은행 홈페이지, FujiSankei Business I, 6/8, 마이니치신문, 6/4)